

# 한반도 평화없이 동아시아 평화·번영

## 이집트 「알·아랍」 지와의 회견

1981년 1월 3일

질문 : 한국정부는 고 박대통령의 서거 이전부터 원유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중동 산유국들과의 관계강화에 관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한·미 양국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들을 계속 추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한국과 「아랍」 여러 나라와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기 1204~5년에 「아랍」 상인 200여명이 한국을 다녀갔으며, 그 중 한사람은 한국여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접촉은 1960년대 후반기부터였습니다.

한국과 「아랍」 국가들은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강대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독립을 찾아야 했고, 피식민지국가로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되찾았을 때 우리는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해 상호보완적인 경제, 기술, 자본의 협력을 해 왔습니다. 국제정치상으로는 우리는 주권의 상호존중과 영토보전을 존중하는 개방적이고 평화적인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외에 과거의 찬란한 문화적 유산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우리는 중동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으며, 우리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242호를 지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란」과 「이라크」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중동전역의 여타의 분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어, 이 지역에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정착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희망과 정책은 비단 산유국에 대한 좁은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전 아랍국가들이 우리와 함께 발전 반영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중동 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계속 그 폭을 넓혀 발전의 동반자로 함께 발전토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미간의 정상회담은 현재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상호 필요와 편의에 따라 언제든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질문 : 주한미군철수문제는 당분간 동결되어 있으나 미국은 내년에 이 문제를 재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위기와 같은 현재의 국제정치 정세와 관련, 공산국가들을 포함한 외국들에 대한 향후의 외교정책이 어떤 것이 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각하께서는 한·미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정치, 경제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사가 분단되고 건설적인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동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 지역의 평화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도 공통된 기본인식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없이 동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우방국가들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한국은 이미 1973년에 밝힌 것과 같이 이념과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호혜평등과 상호문화개방을 그 원칙으로 삼는 외교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는 이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에 한·미관계는 이제 상호존중과 신뢰에 입각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새 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봅니다.

본인은 최근 한·미 양국 국민들간에 양국의 우호관계가 상호이익에 부합되며 공동목표 수행에 공헌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의 발족과 더불어 전통적 한·미우호관계는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서방세계의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새 지도체제하의 중공을 동남아에 있어서의 소련의 패권정책에 대항할 주요세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련의 패권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이 무엇이며, 이에 대항하는 중공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국제정치에서 패권문제는 어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월등하게 강한 경우에 제기되기 마련입니다.

중소분쟁은 그 역사가 깊고 뿌리가 깊은 것으로서, 근년에는 동남아세아에서 그들간의 세력각축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긴국경선을 가진 중공으로서는 특히 월남의 대소경사, 월남군의 캄보디아개입으로 초래된 일련의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동남아국가들이 자신의 안보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1980년대 국제정치양상은, 종래 강대국관계가 국제정치 질서를 압도적으로 지배해 온 것과는 달리,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세력권 또는 국가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그들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동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최근 동남아에서 야기되는 강대국간의 세력권 확대경쟁으로 그 지역의 약소국가들은 군사기지화한다거나 이로 인해 각국의 자유항행에 위협이 된다면 세계평화유지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4강의 이익이 교차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관건은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자체방위력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또한 주변강대국들의 분별력있고 신중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되는 때라 봅니다.

질문 :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소련군이 철수하리라는 아무런 징후도 없는 가운데 이제 2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한국의 입장 및 역할에 관해 자세히 밝혀 주시겠습니까?

답변 :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전반적인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독립, 주권 및 영토보전이 존중되고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외부의 간섭없이 평화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 최근의 오일쇼크는 유가의 앙등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필요한 원유량 확보의 전망마저 불투명하게 만듦으로써 한국과 같은 비산유국인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유의 안정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각하께서는 어떤 명확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답변 :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확보하는 우리는 산유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국제무역이 확대되면 지불능력이 커지고 자원에 접근할 여건이 좋아질 것입니다. 전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세계질서를 잘 유지해 주기 바라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또한 산유국에 대해서도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가 기여할 바를 찾고 있습니다. 단지 건설, 기술협력, 상품무역뿐 아니라 교육·문화의 각 방면에서도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고 품질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무역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국제시장에서의 원유확보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질문 : 한국정부는 최근 환율과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의 국제수지를 다소 호전시킬 것임이나 국민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다 줄 물가고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의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원유의 가격인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산유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한편 국민들은 원유가의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통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원유가격에 적응하고 다시 생산성을 올려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우리의 수출실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가 늘어난 반면 수입은 9.4%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소비 또한 같은 기간에 1.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제 수출이 늘는 분야에서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으며 가동률 증대의 부분에는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늘면 소득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또한 소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수출·투자·소비가 늘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를 개선하면서 경제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의 면을 보면 에너지사용 합리화정책을 펴고 있으며 주택건설

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공급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과잉수요에 의한 인플레이는 앞으로 2~3년간 없을 것으로 봅니다.

통화정책 역시 지난 3년간 우리는 통화증가율을 감속시켰으며, 불황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통화팽창률을 안정시켰습니다.

앞으로 석유가격의 폭등만 없다면 수요·공급·통화 각 방면에서 내년 가을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1982년에는 정상화되고 1983년이 되면 인플레이는 국제수준에 머물 것이며, 경제성장률은 7~8% 정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 :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대화는 최근 어떤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변 :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우리의 통일정책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북한 적십자사를 통한 이산가족재회, 단계적인 인적·물적교류, 남북한조절위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부터 처리하자는 제안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적 염원과 양식에 입각하여 지난 9월 26일과 10월 3일 두차례에 걸쳐 다시 회담의 속개와 대화의 계속을 북한측에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어떠한 긍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회담중단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주장으로 소위 "고려연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우리 정부의 전복과 친공정권수립을 노리고 있는 동시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데 그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방법, 그리고 상호내정불간섭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민족통일을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질문 : 각하께서는 「이집트」와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답변 :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국민은 「사다트」대통령의 위대한 영도력하에 급속히 발전되어 가는 「이집트」에 대해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사다트」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용단과 행동은 모든 지도자의 본보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시아시피, 우리 양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특히 1962년 주「카이로」총영사관 개설 이후 항상 우호친선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우호친선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의 협력관계, 특히 경제통상관계는 양국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급속히 발전해 왔습니다. 귀하와 같은 귀국의 저명한 언론인을 포함한 정부, 민간사절단의 교류증진은 양국간의 이해 증진과 상호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양국민은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공동이익을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 양국간의 관계를 조속히 외교관계로 격상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귀국이 그간 우리에게 보여준 우호적인 입장에 대해 감사하며, 특히 「사다트」대통령이 작년 고 박정희대통령의 불의의 서거시 표시해준 특별한 조의표시에 다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질문 : 최근 한국이 겪은 정치사태의 배후에 외국의 작용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답변 : 지난 1년간 우리의 정치적 민주화 발전과 안정 속의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혼란을 악용하여 적화통일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우리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이를 배격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외부세력이 국내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질문 : 각하께서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어야 하나 동시에 국가의 생존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답변 :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생활다운 생활은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입각할 때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공산주의와 다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이라 봅니다.

개인이 무시된 전체주의적인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립하지 못한다면 각자의 자유와 인격의 존엄성 또한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봐 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양자간에 조화를 이룰 때 개인과 국가의 번영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전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는 야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북한공산체제와 한국이 지난 35년간 극단적인 대치상황하에 있어왔다는 사실이 특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이러한 특수상황하에선 개인의 자유는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존중돼야 합니다. 우리는 방종과 무질서를 허용할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 아주공동시장과 같은 기구를 형성하는 데 대해 각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현재 남북간의 대화, 바꾸어 말하면 부국과 빈국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 아세아 각국이 모여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역국가간의 협의를 하고 무역을 확대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나라가 모여 공동시장을 결성한 후 그들간에만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외부국가들에 대해서 무역을 제한하는 공동시장은 세계무역 확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국제경제는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후진국들은 무역확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다 그렇게 전진적으로 되면 무역이 확대되어 경제적 남북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빈부를 없애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공동시장 형성으로 무역이 저해된다면 후진국에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빈부의 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역장벽을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할 것입니다.